

김정일 체제의 특성과 전망

김 영 수
(제주대 강사)

目 次

- I. 머리말
- II. 김정일 체제의 의미와 과제
- III. 김정일 체제유지의 사회·문화적 요인
- IV.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능성
- V. 조기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VI. 맺음말

I. 머리말

김정일의 공식승계에 대한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문제는 이제 무속인들의 단골예언 메뉴로 오를 정도가 되었다. 최근에는 김정일이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군부통제설」, 뿐만 아니라 이미 김정일이 거세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실질적 거세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모두 당 총비서 및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이 승계하고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김정일은 자식으로서의 「효성」을 권력승계의 지연 명분으로 내세운 채 이른바 「유 혼통치」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통치방식을 통해 김정일 지도체제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며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상당기간 동안 김정일 지도체제의 기틀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권력승계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정일 중심의 「유일 지도력」, 형성작업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지켜 나가려는 김정일로서는 「김일성 시대」가 남긴 국제적 고립, 경제적 위기, 부정부패 등 50여 년 동안 누적된 온갖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

면과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 시대」는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북한 역사의 흐름에서 김정일 체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체제의 특성과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II. 김정일 체제의 의미와 과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공식 선전문구나 「유훈통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체제가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과거 20여 년의 북한 역사에 김정일이 깊이 개입해 온 사실은 북한의 오늘이 과거의 연장 혹은 확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김정일 시대」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출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김정일 시대」는 가장 안정적으로 구시대를 이어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 위기, 외교적 난관 등이 산적한 어려움을 앞에 두고 출범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북한 위기의 상당부분이 「유일체제」의 비효율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유일체제」가 안고 있는 비민주성과 낮은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는 「유일체제」의 비효율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고유환, 1996, 8-10).

결국, 전반적으로 북한 역사에서 「김정일 시대」는 기회보다는 위기요인을 훨씬 더 내재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과거와의 연속적 측면이 오히려 커다란 부담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체제가 내재한 역사적 유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숭배의 문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즐기차게 전개되어 온 북한 사회에서의 개인숭배 캠페인은 사회·문화와 경제의 양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부정적 현상들을 낳았다(이종석, 1995, 340).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주체사상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유일지도체계 형성과정에서 수령을 향한 극단적인 구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성을 잃고 사실상 피동적 개체로서 기계적 집단의 한 부분으로 전락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일지도체계는 이견세력이 존립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사문화시킴

으로써 정치의 역동성을 거세시켜 왔다. 즉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동원체계화·획일적 집단주의화가 진행되고 모든 사회적 성격을 갖는 사유활동은 수령 교시의 범위 내에서만 천명되고 토론됨으로써 사회의 창의력을 고갈시켜 왔다.

특히 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수령의 사상이나 교시, 그리고 그 해석권자인 후계자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견해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창조성과 체제 비판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봉쇄해 왔다(이종석, 1995, 340-341).

한편, 김정일 체제를 특징짓는 「유일체제」는 정치적 목표에 경제의 합리성을 종속시키면서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투자순위를 왜곡시켜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사회는 최고 지도자의 위신과 국가의 자주성과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건축물 조성이나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예산투자를 해 왔는데, 80년대에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된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 경기장, 인민대학습당의 건립이나 89년에 있었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유치 등이 경제의 합리성을 무시한 국가투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더욱이 60년대 중·후반부터 「유일체제」의 유지·강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경제의 논리가 배제된 동원화 정책들이 지속돼 왔는데,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의 정치적 목표에의 종속」행위는 결국 오늘날 북한 경제의 침체를 낳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결국 「유일체제」는 그 속성상 창의력을 고갈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질적상승을 의미하는 내포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다. 「유일체제」하의 경제방식의 대표적 예가 사상동원과 동원화된 사회체계에 기초한 속도전적 방식인데, 이 속도전의 기초인 「사상론」과 동원화가 기본적으로 생산력 발전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는 데 한계를 지녀 왔던 것이다.

즉,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생산력발전 문제를 정치사업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중의 개성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기술혁신을 부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¹⁾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산술적 증산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이 경제 방식은 개성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

1) 낙후된 공작기계공업 및 전자자동화공업 수준을 높이고 각종 공작기계를 양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중노력경쟁운동이다.

모든 공장·기업소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작기제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기계별로 별도로 선반·터닝반·볼링반 등의 공작기계를 한 대 이상 제작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운동은 당초 1959년 5월 「5월 10일 공장」(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함북 청진)서 시작됐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중단됐었다. 그러다가 1985년 6월 김일성이 함북 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재차 발기하면서 이 운동은 다시금 기계공업육성의 주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 운동은 초기의 운동과 구별하여 「1985년 6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정일에 의해 「80년대 속도창조운동」과 밀접히 연계되어 전군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는 기술혁신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이었다.

결국 속도전적 경제건설방식은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경제가 내포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는 심각한 자기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전적 경제방식의 한계가 오늘날 북한 경제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 체제는 역사적으로 정치사회적 측면이나 권력교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유산들의 기저에는 거의 예외없이 「유일체제」의 논리가 깔려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 시대」는 궁극적으로 체제를 위협할 지도 모를 역사가 남겨준 부담스러운 유산들을 내재한 채 출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체제의 출발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나, 그것이 곧 김정일 체제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사가 남긴 부담스러운 유산들을 청산하거나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재로서 이 일이 쉽지 않다.

김정일 체제의 과제는 분야별로 다양하나 현재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침체에 빠진 북한 경제 활성화라는 고민이 놓여 있으며, 이는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이라는 방법론과 연결되어 있다.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방기조를 유지할 경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다원적 요소가 전체사회에 확장되면서 체제의 유일성과 맞부딪치게 되며, 이는 결국 심한 사회적 동요나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김정일 체제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일 체제의 딜레마가 있다.

Ⅲ. 김정일 체제유지의 사회·문화적 요인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당면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굳건히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북한의 내일은 누가 책임지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라는 중대한 문제다.

「지금까지의 북한」은 김일성이 존재함으로써 체제유지가 가능했다. 이른바 「김일성 중심성향」은 통치엘리트들이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통치형태를 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권위관계를 택한 결과였는데, 이러한 권위관계가 수령-당-인민중심의 체제조직원리에 반영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권력이 사랑과 은혜」로, 「통제가 귀속감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욕구와 의지가 공권력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강하게 유지돼 왔다.

이런 성향은 북한 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폐쇄성」이 뒷받침해 왔는데, 사회성원들의

이동의 자유와 대내외 정보접촉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지상낙원이라는 이른바 「복토」관념에 기초한 민족적 자부심이 유지될 수 있었다.

결국 체제의 기본작동원리라는 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에는 전통사회의 기본작동원리인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피지배 관계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사회의 기본작동원리였던 전통적인 부자관계가 아버지같은 지배자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형제관계는 사회조직내에서 조직원끼리 동지관계의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가」중심적인 내면적인 성향이 집단중심적인 외향적 성향으로 전환되어, 전통사회를 유지하던 유교적 원리와는 많은 점에서 혁명적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개념이 투영된 수령과 인민의 관계설정, 모든 인민을 형제관계로 보는 혁명적 혈연관계, 그리고 인민의 호주인 수령을 모시고 함께 잘 사는 대가정을 이루려는 북한 통치엘리트들과 인민들의 의식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하나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북한 사회에는 전통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자관계에서의 「효」와 일본사회에서 중시하던 군신관계의 「충」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이른바 「부자관계에서의 충」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강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영수, 1992, 155-156).

이는 유교 사회의 핵심인 오륜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의 주축을 이루던 실질적인 부자관계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약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전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군신관계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지배형태를 만들어 나간 결과이다. 즉, 새로운 사회구조에 전통적인 부자관계가 투사되어 새로운 군신관계가 만들어 짐으로써 마치 거대한 가족국가가 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는 단순하게 군신간의 의리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일인 지배자와 인민의 관계가 군신관계를 초월한 부자관계로 변함으로써 「의」가 아닌 「인」의 통치가 행해져 온 사회, 즉 「아버지 수령의 자애로운 은덕으로 덕치를 행하는 사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사회작동원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질적이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지배-피지배 권위관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작동원리의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이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익숙한 정향이었던 데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신민형의 의식구조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도자 변경방식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일 수

있다. 즉, 사회주의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인 진정한 「북한인」이 전체인구의 80%를 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국가주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은 정형화된 인간형으로서 정치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절대적 충성과 자발적 복종이 생활화된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령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자질면에서 정통성만 갖춘다면 그 후계자에 의한 통치문제는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 지도자 교체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조선조와 일제 때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통치자를 인민의 뜻에 따라 선출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북한인」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정치적 행위가 오히려 「비전통적이고 낯설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성분이 매우 동질적이며 이미 기득권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권력엘리트 내에서도 김정일 집권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궁정쿠데타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김일성을 향한 충성심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쿠데타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 충성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이 쿠데타의 위험도보다는 낫다는 계산에서 선불리 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자 세습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직접 표출시킴으로써 자진해서 「총대를 매기보다는」 참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심리가 한동안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의 북한」을 유지해 온 이러한 북한 사회의 기본 작동원리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의미있는 변화를 단기간내에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즉, 지도자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나, 체제를 작동시켜 온 기본원리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없는 김정일 체제가 큰 무리없이 작동하리라고 본다.

요컨대, 「누가 북한의 내일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통치주체의 문제는 큰 변화없이 해결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IV.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능성

한편,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체제운영문제를 놓고 볼 때는 통치주체문제와 달리 북한 사회의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남한에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대남적화를 위한 역량증진도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체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개발카드를 활용하여 국제혁명역량의 급감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한의 반정부세력을 고무시키는 통일전선전략을 계속 실행하여 남한의 혁명역량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해 주체사상의 통합가능 한계를 보완하고 있고,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논리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통치엘리트들은 「3대혁명역량」의 총체적 위기를 나름대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²⁾ 그들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일시적인 우여곡절”로 간주하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에서 배운 「역사적 교훈」은 바로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 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김정일, 1992). 따라서 앞으로 짧은 시일내에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제를 포기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수호 의지와는 달리 최근들어 북한은 「삶의 양과 질」이라는 차원에서 체제유지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이나 사회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 초기 북한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사회주의권 해체의 바람이 불어닥친 199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식량부족현상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 이제 경제회복 문제는 북한체제 유지의 가장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최근 별목공을 포함한 귀순자들 대부분이 “밥만 해결되었으면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데서, 북한 사회는 이미 배고픔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김정일체제의 향방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강제와 동원을 통해 수령중심의 「우리식

2) 「3대혁명역량」이란 1960년대 중반에 규정한 「조국통일을 위한 북조선 혁명기지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노선」에 따른 개념이다.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그 보조수단으로서 물질적 자극을 활용해 주민들의 복종과 충성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까지 적절히 구사해 온 「정치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교묘한 배합을 능가하는 통치수단을 찾기 어렵다. 만일 악화된 경제상태에서 물질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정치적 자극만 주게 되면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수립해 나가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김일성 시대와의 비교에서 오는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유환, 1996, 10). 따라서 물질적 자극을 유지·강화시키는 이른바 「선물정치」를 위해서는 예컨대 식량, 생필품, 외화 등이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식량부족, 생필품부족, 외화부족의 「3부족」 해결여부가 김정일체제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라는 이른바 「3대제일주의」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포·강조함으로써 「3부족」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확대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른바 「신무역체계」를 도입하여 생산과 무역부문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가 대외무역까지도 직접 담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김영수 외, 1996, 321-325).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정책도 「3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 현재까지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청진 자유무역항」설치에 국한되어 있는데, 개방지역 이외의 내륙지역에서는 합영·합작법을 활용한 외자도입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특구에서는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주력수출생산기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박순성, 1996, 6-16).

최근 북한이 신의주, 금강산, 남포지역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특구 개발정책의 윤곽을 그려보면 우선 북한을 사각형으로 생각하고 경제특구를 사각의 끝점에 설치하면서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즉, 나진·선봉지역은 물류사업 및 중공업중심지, 신의주는 경공업 수출단지, 금강산은 관광단지, 남포지역은 전자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이 서로 선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충망식」 개방법을 의미한다(김영수, 1994, 28-29).

또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3부족」 특히 외화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미관계개선은 우선 국제금융기관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이 미국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해 차관공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진전은 약 50억 달러의 보상금 지급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이 금액은 경상 GNP가 20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생존권 확보라는 안보차원은 물론이고, 경제난 해결의 핵심열쇠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밥을 먹는데 바른 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손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없다.”는 김일성의 이른바 「좌수우수론」이 지배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국제경제협력까지도 도모하는 북한식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존을 위한 필요가 김정일로 하여금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북한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개방의 파장을 예상하여 주민들의 사상통제수준을 높이고 개방의 통제를 최대한 확대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즉, 생존을 위한 필요에 의해 방충망식 개방을 진행시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제반 교류가 실행하게 된다면 북한 사회에도 머지 않아 이른바 「코카콜라니제이션」(Cokacolanization)현상이 나타나는 등, 의미있는 사회변화가 정치·경제적 변화의 부산물로 서서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 「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은 거의 존재할 수도 없었다. 당과 국가, 그리고 수령중심의 전체주의적 사회를 유지해 왔고, 전통 유교원리에 입각한 유기체적인 대가족국가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변동은 항상 정치영역 속에서만 종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행진을 시작한 것인지의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북한 「사회」가 상상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갖게 되어 이른바 「평양의 봄」, 「평양 사태」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V. 조기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근들어 북한체제의 이상을 알리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수재 후유증으로 더 심각해진 식량난, 늘어가기만 하는 탈북자 행렬, 외교관 부부 귀순에 이은 김정일 측근의 망명사건, 노동당 보안대원의 망명기도에 의한 평양 한복판에서의 총격전, 그리고 청진에

서의 반정부데모 소식 등, 체제유지가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조짐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든지, 실권은 군부에 의해 장악되고 김정일은 한낱 상징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장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그리고 북한 붕괴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붕괴 임박론」은 이런 상황에서 그 논리를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여름 물난리가 나게 됨에 따라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돼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극한상황에 빠져 있다.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결국 자연발생적인 민중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때 주민저항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대규모 검거선봉을 피해 대탈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국가의 사회통제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북한체제는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는 달리 북한체제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북한체제가 흔들리고 체제가 붕괴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북한붕괴를 속단하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유일한 지도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지도력」은 큰 이상없이 북한체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이 아직까지 견고하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맡고 있던 「수령」을 나타내는 최고위 직책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김정일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억측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도 김정일 위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즉 김정일의 불안한 위치가 북한체제 붕괴요인의 설득력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왔다.

그러나 김일성 생존시 구축해 놓은 김정일의 당·국가·군에 대한 장악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김일성 사후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는 데서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에 큰 이상이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지금까지 북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수 편의 글을 발표해 왔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최진욱, 1996, 102-106). 그리고 북한 선전매체들은 연일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 공식발표는 시기만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단지, 경제적 난관의 지속과 수재 등으로 추대여건 조성이 여의치 못한 점, 그 상황에서 권력기반의 공고화와 정통성 증대를 위해 김일성 유훈 및 후광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또한 내부적으로 김일성 통치를 결산하고 김정일 자신의 새로운 통치노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권력승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김정일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권력의 공식 승계는 앞에서 지적한 지연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또한 김정일을 상징적 지도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김정일의 활발한 활동에서 이의 신빙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일 권력장악 하의 권력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층이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력투쟁이나 노선갈등의 조짐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김정일체제 유지와 동일시하여 김정일에 충성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 계속 진행된 김정일 후계구축작업으로 친위세력이 당정군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고 여단장급 이상 대부분의 중견 장성들이 김정일 직계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망명사건을 놓고 북한지배층의 이탈현상으로 해석하여 북한체제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반드시 체제붕괴의 징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망명은 북한체제 본질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대사관 내부불화 및 사적인 감정이 빚은 우발적 행동이며,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 탈출사건도 김정일 가족내부에 국한되는 문제인 것이다. 총기난동사건도 미묘한 시기와 겹침으로써 확대된 점 없지 않다. 60년대 후반 스탈린의 딸 스페틀라나도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고, 카스트로의 여동생도 쿠바를 탈출, 미국에서 반쿠바운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소련과 쿠바의 붕괴를 상징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최근 사태 하나 하나를 모두 붕괴론과 연결지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Georgie Ann Geyer, 1991, 403).

또한 단기간내의 집권층 균열발생도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지도부 균열방지 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왔으며, 특히 집권층내의 균열은 「반체제」내지는 「반김일성」으로 해석되는 체제운영논리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김정일정권이 유지되는 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성분이 매우 동질적이며 이미 기득권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권력엘리트 내에서도 김정일 집권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궁정쿠데타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한 충성심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쿠데타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 충성함으로써 확보되는 이익이 쿠데타의 위험도보다는 낫다는 계산에서 설블리 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부자세습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직접 표출시킴으로써 자진해서 「총대를 매기보다는」 참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심리가 한동안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³⁾

셋째,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징후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심계층에게까지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잘 길들여진 개는 배고플 때 주인 말을 더 잘 듣는다」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체제순응적이며 궁핍에 대한 강한 내구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경제난이 단기간내에 체제붕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는 그 폭이 대단히 크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대규모 탈출사태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부터,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경제위기가 체제붕괴로 이어질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관찰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식량문제를 놓고 분명한 사실은 식량난의 실상보다는 식량난을 둘러싼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정치적 인질의 성격을 띤 국제적 문제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전체붕괴 위협」이라는 제목을 즐겨 써 왔으며, AP통신은 북한의 기아문제를 집중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주로 탈출하는 북한난민문제를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과대평가해 왔다. 이것 모두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식량난 폭로기사가 목표로 한 첫번째 대상은 다름아닌 한국정부였다. 클린턴 정부는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측과 빛은 불협화음을 무마하고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 북한붕괴 위협 뉴스가 노리는 두번째 대상은 일본이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철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본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북한 상황의 악화가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극 내비친 것이다. 또 북한뉴스는 미국의회를 겨냥했다. 몇몇 의원들이 대북협상에서 미국측의 양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대북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관련 폭로기사는 이같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다. 북한붕괴와 그에 따른 한반도의 혼란 및 적대상황이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3) 이런 정향에 대해 쿠란(Timir Kuran)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변형인 「선택위장이론」(Preference Falsification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Timir Kuran, 1991, 16-25).

위협천만한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운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미국방부는 매년 3, 4월 경이 되면 북한에 관한 소식을 흘려왔다. 10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국방예산안이 이 시기에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북한에 대한 우려가 국방예산 통과는 물론 심지어 예산증액을 얻어내는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끝으로 북한관련기사는 허를 찔리지 않으려는 미국관료들의 자기방어전술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사건돌발을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관료들은 미리 비관적인 평가서를 내놓거나 최후의 날을 예견하는 입장을 취하곤 하는데, 만에 하나 북한이 정말로 붕괴의 상황을 맞게 되면 미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은 서로 예측력의 정확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북한식량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돼 왔다. 북한 또한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최근들어 각국으로부터 식량원조 받는 것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사상교육의 강조나 대중의 노력 동원만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차에 엄청난 수재를 입게 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장래를 결정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앞에서 언급한 복잡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 현재는 수재극복이 김정일의 지도력과 체제관리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넷째, 체제붕괴를 속단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북한주민들 정치의식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흔히 독일통일의 예를 들면서 북한체제의 와해를 예상하곤 하는데 여기에는 동독과 북한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간과돼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동독이 아니다. 따라서 동독이 쉽게 무너졌다고 북한도 똑같이 붕괴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독은 공산화되기 이전에 이미 발전된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나라였던 데 반해, 북한은 인권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정치문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역에서 출현한 나라다. 글자 그대로 「신민형 사회」의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서재진, 1995, 199-217).

특히 사회주의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인 진정한 「북한인」이 전체 인구의 80%를 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가주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은 정형화된 인간형으로서 정치문제에 관한 한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절대적 충성과 자발적 복종이 생활화된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평양의 봄」과 「평양사태」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와 유입되는 정보의 여과장치, 감시동원체계 등 제반 사회통제 장치들의 작동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여전히 강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고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이 강화되는 등 정치·사회적인 통제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대규모 민중봉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단지 식량배급을 둘러싼 국부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나 1905년 1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북한밖에 존재하는 망명정부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 주체사상을 대체할 대항이데올로기도 형성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탈출경로도 동구권에 비해 매우 제한돼 있어 불리하다. 더욱이 북한사회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나 인쇄사정도 매우 열악해 단기간 내에 반체제 세력이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북한체제의 특성상 체제내부에 반체제 세력이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섯째, 북한의 대외환경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점 또한 북한체제붕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두 개의 한국정책」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통일된 하나의 한국보다는 분리된 두 개의 한국을 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도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어 국제적 역학관계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한마디로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북한의 급작스런 사망을 원치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국제혁명역량은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재충전되고 있다(김영수, 1996, 770-775).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고위층의 탈북현상 및 식량난을 이유로 해 김정일정권의 조기붕괴와 체제와해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른 판단이라고 본다. 물론 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내에 갑자기 붕괴 할 만큼의 체제해체적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다.

VI. 맺음말

권력장악을 토대로 통치범위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지도력이라고 할 때, 현재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체제 내에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유일한 지도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지도력」은 큰 이상없이 북한체제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예측과는 달리 체제관리능력에 대해 비관적 평가를 내릴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 북한정권의 체제관리능력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본다. 아울러 단기간내의 지도부 균열발생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지도부 균열방지 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왔으며, 특히 지도부내의 균열은 「반체제」내지는 「반김일성」으로 해석되는 체제운영논리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2-3년동안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의 이른바 「공식적인 권력승계」는 첫째, 북한 전체주민의 애도 속에서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효심을 충분히 나타낸 후, 그리고 둘째, 대미, 대일관계 개선을 가시화시켜 안보 및 경제면에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둔 다음 실행할 것으로 본다.

물론 황장엽의 망명으로 북한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김정일의 권력에로의 행진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권력승계를 위한 작업은 일단 97년 7월의 「만3년탈상」이라는 상징적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김정일의 총비서에의 공식적 취임은 「만3년상」이 지난 후인 97년 10월 경 조선로동당대회 계기로 실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 고 문 헌

- 고유환. 1996.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 1996년 3월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 김영수. 1992.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 김영수. 1994. "북한 경제개방의 현황과 전망," 『신아세아』, 제2호.
- 김영수. 1996. "북한정권의 국제적 위상과 전망," 이우진·김성주 공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사회비평사.
- 김영수 외. 1996. 『북한학: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서울: 박영사.
- 김정일. 1992.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년 1월 3일, 당중앙위 책임일군과의 담화).
- 박순성. 1996.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최진욱. 1996.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허문영. 1995. "북한 외교정책 변천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의교사 Ⅱ』, 서울: 집문당.

Geyer, Georgie Ann. 1991. *Guerilla Prince: The Untold Story of Fidel Castro*. Boston: Little, Brown & Co.

Kuran, Timir. 1991. "Now out of Never: The Elements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October).